



# 한국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방향: 가족 가치의 강조와 공동체적 의식의 확산

**최연실** | 상명대학교 교수  
한국가족관계학회 회장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가족에게 상당한 압력을 주고 있다. 생애 과정의 변화에 따라 가족에게 지식의 체계적, 지속적 학습이 요구되며, 제반 구조 변동에 따른 복잡성의 증가는 가족 문제 발생을 증가시켜 가족을 위기와 해체에 이르게 하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가족은 사회적 구성의 기본 단위로서 재생산 기능과 사회화 기능을 유지하고 친밀성을 바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원천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여전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복지 측면에서 국가가 담당하는 부분을 해결한 이후에도 가족에게 기대는 욕구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가족은 관심의 대상이다. 가족은 위험 사회 속에서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가족이 지닌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소극적 접근에서 더 나아가 가족 잠재력을 발굴하고 기능과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을 추구하는 적극적 접근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정책 수립은 이러한 한국 가족의 특수성에 토대를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 가족의 변화 양상과 맥락 속에서는 제도 대 자율, 위계 대 평등, 공동체주의 대 개인주의, 폐쇄성 대 개방성, 획일성 대 다양성, 도구성 대 친밀성 등의 쟁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은 일차적으로는 가족 내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지만 심층적으로 추적해 보면 가족

을 둘러싼 여러 체제나 환경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 가족의 변화 속에서는 이러한 대립 성향 중 한 측면이 뚜렷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양 성향이 혼재되는 추세를 보인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가족은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압축적 근대화’를 거치면서 가족의 피로가 극심해졌다는 인식이 제기된 바 있다.<sup>1)</sup> 이러한 인식은 근대화,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선경제개발, 후복지’라는 한국의 근대국가 정책이 깔려 있다. 이 정책 하에서 국가는 개인의 생존과 보호를 가족에게 떠맡기고 개인이 아닌 가족을 단위로 정책을 펴므로써 가족중심주의를 조장하거나 방조해 왔다.<sup>2)</sup> 가족이기주의 혹은 반사회적 가족은 이런 맥락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기주의가 가져온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 단위의 소통과 연대를 확장하고 가족이 구성원을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는 사회적 개인으로 기르는 민주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이르게 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지만 21세

기형 공동체 가족 모델의 가능성과 장점을 논증하는 연구가 제시되기도 한다.<sup>3)</sup> 한국 가족은 아직은 개인주의보다 공동체 지향적, 가족 지향적 성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는 한국 근대 핵가족의 가족주의가 가족의 공동 이해를 최우선으로 삼은 것이었다면, 21세기형 공동체 가족은 개인이 모여 평등한 가족을 이루되 구성원들의 개인주의적 성향보다 공동체적 성향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한국의 가족은 개인화가 진행되어 물질적·정서적으로는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지만 개인주의보다 가족 지향성이 강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성이 강한 한국 가족은 한편으로는 서구의 가족처럼 평등한 물질적 과제 해결 기능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와 달리 정서적 과제 해결 기능도 강하게 작동되는 장점을 지닌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그동안 가족의 생존과 안정을 위해 희생되거나 부차적으로 간주되었던 다른 가치들도 중시되면서 가족주의의 내용이 변화되고 있다. ‘일차적, 기초적 물질 중심 가족주의’에서 ‘이차적, 비물질적, 수평적 네트워크형 가치 중심의 가족주의’로 이동 중인 것이다.<sup>4)</sup> 이처럼 한국의 가족주의의 내용에서 보

1) 장경섭. (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서울: 창작과비평.

2) 최유정. (2010). 가족정책을 통해 본 한국의 가족과 근대성. 서울: 박문사.

3) 심영희. (2011). 21세기형 공동체가족 모델의 모색과 지원방안: 2차 근대성과 개인화 이론의 관점에서. *아시아여성연구*, 50(2), 7-44.

4) 권용현. (2013). 한국의 가족주의에 대한 사회철학적 성찰. *사회와 철학*, 25, 203-232.

다 성찰적인 가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외부 상황의 변화, 즉 최소한의 가족복지에 국가가 개입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확대를 옹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실질적으로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가족정책 수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치는 공동체 의식, 민주사회 시민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가족에게 과증하게 부과되었던 물질적, 도구적 가치에서 정신적, 정서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이 미래의 가족 시나리오로 희구하는 것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친밀하지만 느슨한’ 가족 구조와 관계를 반영하면서,<sup>5)</sup> 친밀감 증진, 소통, 가족 유대가 강조되는 동시에 개인적 가치와 권리가 존중되는 ‘열린 가족주의’<sup>6)</sup>의 대안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구상해 볼 수 있는 전략은 학문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학문적 차원에서는 첫째, 가족 연구(가족 철학, 교육, 상담 등 개입 기술) 프로젝트를 지원할 통한 이론적 토대 구축, 둘째, 정부 관련 부처와의 연계 도모로 대학에서의 가족 관련 전공 지원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가족 관련 과목의 필수교양 교과목 정착을 구상할 수 있다.

실천적 차원에서는 첫째, 가족 관계 증진이나 개선 등 가족 진흥을 정부의 기초정책으로 설정, 둘째, 가족교육을 시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확충과 활성화, 셋째, 평생학습, 지역사회 프로그램(예: 강연, 토론회 등)과의 연계, 넷째, 시민 인문 강좌 등의 결합을 통한 인문정신 고양, 다섯째, 시민단체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체 의식 및 민주 시민 의식 함양, 여섯째, 가족 전문가 자격 제도의 정비, 일곱째, 가족 교육을 실천하는 가족친화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의 수립, 여덟째, 가족 진흥 캠페인 주도 및 시민단체, 대중매체 등과 연계한 ‘가족을 통한 행복’, ‘개인과 가족이 모두 행복한 사회’ 의식 고취, 아홉째, 건강검진과 같이 가족 기능도 정기적 진단을 받고 필요한 경우 가족생활교육이나 가족 상담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 수립 등이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제안이 모두 탐색적이고 실험적인 수준에서 거론되는 데다 본격적으로 실현하기까지는 난제도 상당히 많지만, 가족정책의 본격적인 실행은 한국 사회가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발전적 토대를 구축하는 길이 될 것이다. ■

5) 장혜경, 김영란, 김소영, 이아름, 안경희, 류연구 등. (2014).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Ⅳ).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 권용혁(2011). 한국 근대가족에 대한 성찰. **사회와 철학**, 22, 59-84.